

2015 서른 네번째 인권주일 자료집

교회와 인권

목차

여는 말 - 인권주일 자료집을 준비하며	04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걸어온 길	07
천주교인권위원회,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11
강론글1. 한국 난민제도의 현황 및 문제 김세진,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변호사	21
강론글2. 회칙 「찬미받으소서」 박동호, 신정동성당 주임신부, 서울 정의평화위원회	25
강론글3.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9
강론글4. 해방과 분단 70년, 이제 평화를 실천할 때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주해군기지저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35
강론글5. 세월호와 메르스, 그리고 인권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41
강론글6. 재난 시대의 혐오 손희정, 땡땡책협동조합 이사	47
2015 인권주일 강론 강사 파견	51



인권주일 자료집을 준비하며

해마다 성탄 대축일이 다가오면 맴도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대접을 받으실까요?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당신의 말씀을 물질 모르는 이야기로 돌리거나 기껏해야 그저 하나의 수사, 비유로 받아들이지는 않는지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대림 제2주일이자 한국교회가 선포한 인권주일을 맞아 해마다 강론자료를 모아 자료집을 내왔습니다. 올해는 △교종 프란치스코의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문제점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으로부터 돌아보는 한국의 난민 문제 △해방 70년을 맞았는데도 여전히 전쟁 위기와 한반도 평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가 던지는 질문 △재난시대에 창궐하는 혐오의 문제 등 모두 6건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해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고민을 교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해를 돌아봅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 그리고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가족들이 이제는 세월호광장이라 불리게 된 광화문광장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가 만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세력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위로 받아야 할 세월호 가족들의 몸부림이 ‘생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일개 교통사고’이자 ‘유병언이라는 부도덕한 개인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해고의 자유를 확대합니다. 인간을 이윤 추구를 위한 물건처럼 다루면서 오직 노동기술과 노동력으로써만 노동자를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개혁’이라는 것이 이뤄진다면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 다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민족들의 합법적인 제도에 적용된 소유권의 형태가 어떠하든, 언제나 재화의 이 보편적 목적을 명심하여야 한다”(사목헌장 69항)는 교회의 가르침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일에 경제 논리를 우선하는 차별과 혐오의 시선이 우리 안에 만연하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여름에는 한반도가 전쟁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남북이 준전시 상황까지 치달았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기뻐해야 할 광복 70년이 실은 분단 70년임을 각인한 사건입니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까지 성사되었지만 언제 다시 준전시 상황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한반도의 처지입니다.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일깨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9월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이 세계를 울렸습니다. 경제를 해친다는 이유로 난민들을 회피하던 국가들이 잠시지만 국경을 열었습니다. “로마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의 교구, 종교단체, 수도원과 성소 등이 난민 1가구씩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는 교종 프란치스코의 말씀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한국이야말로 국경을 두드리는 난민들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서른네 번째 ‘인권주일’을 맞이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자임한 역할을 잘 해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시대의 징표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읽어내고 그 부름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답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억눌리고 소외된 이웃들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소명을 다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불의하고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치권력보다 힘이 센 자본권력의 억압, 사회에 만연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투신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작은 울림만이 아닌 교회 너머의 세상을 향한 크고 단호한 외침이 되고자 늘 교회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전혀 받지 않는 NGO입니다. 저희의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매년 인권주일 2차 헌금을 모아주시는 각 교구의 본당들과 수도회, 그리고 매월 정기후원을 해주시는 후원자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언제나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응원해 주시고 더불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표현이 서툴고 모자라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인권의 현장을 지키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을 접하는 모든 분들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6일
서른네 번째 인권주일을 맞이하며
천주교인권위원회 드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걸어온 길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인간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서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中)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청과 관심에 가톨릭교회가 함께 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곁에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켜내고 이 땅의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사제, 수도자, 자매, 형제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동체입니다.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산하 인권위원회로 시작하여, 1993년 천주교인권위원회로 독립 출범하여 올해로 활동 27년, 창립 22년을 맞이했습니다. 출범과 함께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간첩’들의 진실을 찾기 위한 조작간첩사건들의 진상규명활동과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버렸던 사법살인 인혁당재건위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0여년의 노력 끝에 재심 무죄와 국가배상을 이끌어 낸 것을 시작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조작과 고문으로 만들어진 간첩 사건들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형제도폐지 운동,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등의 악법 폐지 운동, 반전평화운동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의를 우리 사회에 증거 하기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검찰, 경찰, 교도소 등에서 공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들에 대한 대응활동을 오랜 시간 끈질기게 이어 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정리해고와 온갖 차별 속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폭력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집을 짓기 위해 집을 부수는 재개발과 뉴타운의 환상에 밀려 점점 도시의 변두리로 쫓겨 가는 서민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감옥에서 평생을 갇혀 살며 온갖 인권 유린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 생활인들의 곁에서 있고 싶습니다. 감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교만을 접어두고, 억울한 눈물 흘리는 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기도하며 싸우고 함께 비를 맞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와 국가폭력 피해의 상징이 되어 버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S), 시멘트와 항공모함에게 바다와 구렁비 바위를 빼앗기고 감귤 농장 대신 경찰서와 구치소를 오가야 하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K), 살려고 올라간 망루에서 경찰특공대의 강제진압으로 인해 주검이 되어 돌아온 가족들의 시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용산참사 유족들(Y), 평생을 일구어 온 땅과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76만 5천 볼트 송전탑을 막아서다가 경찰들에 사지가 들려 내쫓기는 칠십, 팔십의 밀양 주민들(M)이 바로 이 땅의 하늘입니다. ‘SKYM_쌍용」강정」용

산「밀양」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곁을 지켜야 할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 모두의 이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고 단 한명도 위기에서 구해내지 못한 무능한 정부를 꾸짖자는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 역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 해야 할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가족들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유족들의 의혹이 해결되고 마음속 깊은 곳의 한이 풀어질 때까지, 모두가 안전한 세상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세월호 가족들 곁을 지킬 것입니다.

아시아 가톨릭의 정의평화단체들과의 연대와 유엔 인권이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대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공부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지구적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의 사형폐지 활동가들과 살인피해 가족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 300여건의 무료 인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 오후 진행하며 법의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분들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후원을 거부하고 어렵고 힘든 고비를 끈끈이 이겨내며, 부족하나마 나름대로의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낌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가톨릭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오늘을 있게 해 주신 유현석 변호사님과 이돈명 변호사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통해 지난 6년간 60여건의 중요한 공익소송들을 진행했고, 지금까지 네차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밀양 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무지개농성단에 이돈명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과 함께 보다 공신력 있는 공익인권단체로서의 외형적 조건들도 갖추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4년 10월 창립총회를 갖고, 2005년 6월 1일 주무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하여 같은 달 16일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8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10월 5일자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11년 6월 30일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게 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8호).

이에 따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기부금을 낸 후원회원 분들은 천주교인권위원회로부터 발부받은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현행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후원회원 분들이 납입하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1항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연말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02-777-0641)으로 연락주시면 즉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가야 할 길, 가야하는 길을 가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모습을 지켜 내겠습니다.

지로번호 7618893
국민은행 004-01-0724-877
우리은행 454-035589-13-101
우체국 010017-02-544517
농협 301-0076-9349-51
예금주 :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후원해주세요.



천주교인권위원회,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공익소송팀

○월요 무료법률상담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명동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교우 여러분들과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소송(유현석공익소송기금)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모든 공익소송은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우리 위원회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다. 교우들과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소정의 절차를 통해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획연대사업팀

2015 <인권과 평화, 그 달콤한 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의 밤과 4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을 사무국, 위원들과 함께 준비하여 3월 19일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월간 소식지 '교회와 인권' 발간과,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천주교인권위원들의 친목문화모임 '두부한모' 모임을 진행해오고 있다. 오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사법연수원생 무료법률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교회사업팀

2014년 인권주일 강론자료 배포와 강사 파견사업을 진행하였다. 112곳의 본당과 수도회에서 인권주일 2차 헌금을 후원해 주셨고, 춘천교구 주문진과 간성, 서울대교구 개봉동, 의정부교구 신곡1동, 전주교구 전동 등 5개의 본당에 강론자를 파견했다. 올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1박 2일 사회교리 피정과 인권주일 강론용 영상제작 등을 2016년 주요 사업으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정책팀

이헌치 기금으로 인권도서를 출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획, 집필 등을 인권정책팀에서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인권도서의 주제는 '이 죽음을 기억하라'로 정하고, 인권활동가들이 활동해오면서 만났던 다양한 죽음에 대해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이다. 인권정책팀 내 도서 출간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따로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천주교 수도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2015 인권입문강좌를 기획하였다. 강의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감시사회의 정보인권, 세월호와 메르스,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본 교회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와 변호사, 교수, 신부가 강의와 토크쇼를 준비하고 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3월에 있었던 ‘416인권선언 제정을 위한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인권선언 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4월과 5월 2차례에 걸친 원탁회의를 통해 인권선언 운동을 책임질 실행단위와 추진단을 결성하였다. 인권선언을 구체적으로 써내려갈 풀뿌리 토론을 위해 304인의 추진단을 모집하였다. 추진단은 자신이 속한 모임 또는 지역에서 1회 이상의 풀뿌리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실행팀에 전달해야 하며 2차례의 전체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최대한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월호참사의 기억을 나누며 다시 세워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토론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했다. 7월 11일 추진단 1차 전체회의는 300여명의 추진단과 인권선언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풀뿌리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을 결의하고,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8월 중순~9월 초까지 총 6회에 걸쳐 ‘세월호참사, 인간의 존엄을 묻다’를 주제로 연속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세월호 참사를 인권의 자리에서 되짚어보며 재구성한 ‘세월호참사, 인권으로 말하다’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11월 28일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70여회의 풀뿌리토론이 진행되었고 7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차 전체회의에서는 416인권선언 초안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과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416인권선언이 발표될 것이며, 이후 2주기까지 선언인단을 모으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세월호참사 피해자 인권실태조사

세월호참사의 다양한 피해자들을 만나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들을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변화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인터뷰는 희생학생·교사 가족, 생존학생, 희생자 가족, 생존자, 생존 화물기사, 이주민 희생자 가족, 미수습 희생자 가족,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 진도어민 총 10개의 그룹에 대해 진행하였다.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참사 1년을 지나오는 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생존학생의 부모, 생존학생의 형제자매,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들, 단원고 재학생, 단원고 교사, 군에 입대한 생존자였다. 보고서는 이 부분을 따로 다루었다. 최종 보고서는 1부 서론, 2부 박탈당한 권리-생명과 존엄에 관한 권리, 진실을 알 권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권리, 3부 국가와 기업의 의무·시민의 책임, 4부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및 인터뷰 그룹별 쟁점과 평가로 구성되었다. 지난 7월 15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인권침해 보고대회를 진행하였다.

○ 팽목항 기다림의 버스

2014년 6월 초부터 팽목항을 향하는 기다림의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미수습자를 위한 팽목항 범국민대회 및 국민행동을 진행하였다. 기다림의 버스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서울 대한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팽목항 포구에서 열리는 ‘팽목항에서 여전히 기다리다’ 예술제에 함께하고 있다.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출모임

지난 7월 16일 박래군 활동가가 세월호 추모 집회를 열고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박래군 활동가 구출 모임을 인권활동가, 변호사들로 구성하였다. 이 모임에서

는 구속규탄 및 석방촉구를 위한 대중적 규탄과 국제사회의 긴급행동을 조직하였다. 또, S쌍용(고동민), K강정(홍기룡), Y용산(정영신), M밀양(이계삼), 민주노총 박병우의 글을 언론에 연속 기고하고, EU 대표부를 만나 현 상황을 전하였다. 박래군 활동가의 석방을 위한 활동들은 세월호 싸움과 깊게 연결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4.16연대와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활동을 지속했다. 그리고 지난 8월 8일(토), 저녁 6시 30분에는 박래군 석방문화제를 광화문에서 개최했다. 김덕진 사무국장의 사회로 박래군 활동가의 지인들과 관련 단체들이 정성을 모아 진행하였다. 석방문화제는 한동준, 안치환, 정민아, 우리나라 등 가수들과 이야기 손님 공지영, 박진, 김수영, 그리고 송경동 시인의 시낭송 등으로 이어지며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11월 2일, 박래군 활동가가 구속된 지 1년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사형제도폐지활동

7월 6일, 19대 국회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새누리당 나경원, 유승민, 정두언 등 43명,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이종걸 유인태 인재근 등 124명, 정의당 심상정, 김제남 등 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여야 172명의 의원들이 법안에서 명하였다. 이 기자회견에 종교계를 대표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유홍식 주교가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발언을 하였다. 또한 8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김유정 신부, 안나마리 수녀, 조성에 수녀, 불교인권위원회 남륜스님, 성원스님과 함께 회의를 방청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안이 있었지만 그냥 상정만 되고 논의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한 채 자동폐기가 되어 왔었음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발의, 처박아두고 방치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사형제도폐지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9월 22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9대 국회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통과를 위한 종교 인권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날 연석회의는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종교인과 국제앰네스티, 민변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10월 20일 사형폐지 호소 7대 중단 수장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공동성명을 전달하였다. 또한, 11월 30일(월) 저녁 7시 30분, 명동성당 파밀리아채플홀에서 사형제도 폐지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지난 해 12개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발족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군인권공동행동)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입법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한 공동의견서를 국회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직접 전달하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후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입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입법촉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2014년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

를 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발언한 이후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이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출범시키고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해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인권 침해사례 대응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 등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2015년에는 사이버사찰금지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했고 국회에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했다. 사이버 사찰을 금지해야 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으로 2주 남짓 기간 동안 2910명의 시민들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했다. 법안은 △메신저,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통제하기 위해 대상범죄를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정보주체의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며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모두 현재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관련 NGO 공동보고서 제출

유엔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2015년 10월 제4차 심의를 받았다. 이에 83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했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NGO 공동보고서로 2015년 초와 9월 각각 발표했다. NGO 공동 보고서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 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심의 기간 제네바 현지에서 활동할 NGO 참가단을 파견했다. 11월 6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포괄적 인종·성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 등을 한국에 권고하는 최종 심의보고서를 채택했다.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5차례에 걸쳐 진행된 희망버스와 관련하여 사법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150여명, 벌금액수는 1억5천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경찰이 발표한 소환자의 수가 250여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벌금액수는 2억5천여만원까지 추산된다. 희망버스 승객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송경동(시인)·정진우(전 노동당 부대표)·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씨가 2015년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2년/집행유예3년(1심 징역2년), 벌금500만원(1심과 동일), 벌금300만원(1심과 동

일)을 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신고를 계기로 진행중인 희망버스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월 현재 전체 168건 중 104건이 종료(무죄 8건, 선고 유예 36건)되고 64건이 계류중이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7월 6일 이탈리아 스파이웨어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이 해킹당해 해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직원 인사정보, 암호 등 내부 자료가 유출되었다. 여기에는 5163부대(국가정보원) 및 중개 업체가 해킹팀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포함되었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사용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북·해외 정보전 차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해킹팀에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시 해킹을 요청했고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해킹 기능을 요청한 사실이 보도되는 등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7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 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 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했고, 7월 30일과 8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약 4천명의 시민이 국민고발단으로 참여했다. 8월 6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노력을 촉구했다. 7월 31일과 8월 8일에는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8월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 임명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0월 1일부터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개발, 배포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5개 카테고리 <집회 전, 집회현장, 연행, 수사, 부록>와 26개 상황별로 정리하여,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대응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상황별로 ▲상황 ▲대응 ▲이렇게 외쳐보세요 ▲용어 설명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더 많이 주장합시다 ▲관련 법령 ▲판례를 담았다. 또한 북마크 및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단어만 넣어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아이폰)용으로 제공되며 각각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반대 운동

밀양에 765KV 송전탑이 모두 완공되었지만 밀양주민들의 탈핵, 탈송전탑 활동은 지속되었다. 밀양주민들이 직접 전국의 초고압 송전선로 경유지들과 송전탑 또는 핵발전소 주변 마을들을 순례하며 만들어낸 책 ‘밀양할매할배들이 발로 쓴 나쁜전기보고서 - 탈핵 탈송전탑 원정대’의 북콘서트와 전국의 극장에서 개봉한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기록 다큐멘터리 ‘밀양아리랑’의 상영회를 진행하였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서울에서 열린 4차례의 북콘서트와 3차례의 상영회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진행하였다.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1년을 기억하는 문화제를 기획하였으나 메르스 사태 등으로 잠정연기하여 7월 18일 밀양송전탑반대 200차 촛불문화제와 함께 밀양역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현재 12월 3일 발간 예정으로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주민투쟁, 인권침해, 에너지정책)와 사진집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같은 날 오전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10년 기자간담회와 발간행사가 열린 예정이다. 12월 5일에는 2005년 처음 송전탑 반대 촛불을 들었던 날을 기념하는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10년 기념 문화제’를 밀양역과 각 마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하는 월례모임 '인권운동장'

인권운동장은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열린다. 인권운동장은 다양한 의제들을 인권활동, 인권활동가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넓히는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다.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월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의미와 인권운동의 과제, 2월 토닥토닥 워크숍 세월호참사를 마주한 인권운동이 띄운 싹, 3월 장그래가 장그래에게 그린라이트를 켜줘, 5월 박근혜정부 비정규대책 ·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대응 · 국제 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연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6월에는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에 함께 하였고, 7월은 상반기 결산의 의미로 활동가들이 서로 연대하며 힘을 북돋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9월은 인권운동과 풀뿌리운동이 만날 때, 10월 인권의 눈으로 본 노동계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후 후속모임을 열어 총 5회에 걸친 프레시안 연속기고를 기획하였다. 11월, 12월은 매년 진행해오던 인권활동가대회 준비와 한해를 돌아보며 인권의 날들을 되새겨보고, 이를 소재로 발간하는 ‘프로젝트 그날들’을 기획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5년은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1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섬’이라는 수사가 무색하게 제주가 군사기지화 되어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워크숍 <동북아, 한반도 그리고 제주의 10년-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남을 것인가>를 강정마을회, 범도민대책회의와 함께 1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개최하였다.

1월 31일 강정마을 내 해군기지 군관사 반대천막 철거 행정대집행을 국방부가 강행하였다. 국방부와 해군이 동원한 용역과 경찰을 포함해 1,000여 명의 병력이 마을에 투입되어 주민 중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24명이 연행되었다. 용역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공권력에 의한 갈등이 더 깊어졌다. 주민과 활동가들은 전날부터 14시간여 동안 비폭력 저항을 이어가고 망루 위에서 끝까지 싸웠다.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의 중재로 연행자들을 조사 후 모두 석방하기로 하였으나 경찰은 연행자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경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강정마을부회장에게도 농성의 책임을 물어 사전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경찰의 지나친 구속영장 신청과, 31일 주민들에게 가해졌던 국방부의 폭력에 대한 비난이 잇따랐다. 이후 8월 26일에 국방부는 강정마을회에 공문을 보내 군관사 농성천막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을 청구하기까지 하였다. 육지부의 경찰 체류비와 이틀간의 걸쳐 고용된 용역비용까지 전부 강정마을회에 청구하였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으로 이미 수억원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 강정마을에 계속 압박만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5월 23일(토) 오후 3시부터 서울 을지로 태성골뱅이에서 <강정 법률지원기금 모금 후원주점>을 개최하였다. 총 4억 5천만원의 벌금 중 5월까지 2억 가량을 모았다. 일부 강정주민들은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수배로 제주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정 법률지원 모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가고자 하고 있다. 이 날 주점에는 밀양주민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용산참사 유가족들도 함께 준비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주점에 참여하여 강정의 평화를 함께 기원하였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 제주시에서 시작하여 동진과 서진으로 나누어 행진하여 8월 1일 강정마을에서 마무리되었다. 세월호 가족, 쌍용차를 비롯한 해고노동자,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용산참사 가족 등 전국에서 평화를 염원하며 모인 연인원 4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였다. 멀리 해외에서 필리핀, 오키나와, 괌, 대만, 미국령 티니언 섬 주민들도 간담회에 함께 하여 군사주의가 주는 고통과, 평화를 일궈나가는 삶에 대한 소망을 나누었다. 8월 1일 대행진 마지막 날에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동진과 서진이 만나 인간띠를 이루며 공사장 앞을 둘러쌌다. 같은 날 저녁에 열린 문화제는 여러 가수들과 밴드, 어린이들의 합창 공연 등으로 어우러진 평화의 축제로 마무리되었다. 8월 3일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3천일에 접어드는 날이었다. 3천일 신문광고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여 제주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렸다.

9월 2일 구럼비 펜스 4주년에 맞춰 서울에서는 삼성물산 본관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되면서 구럼비 바위가 발파되었고, 이에 핵심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뜻으로 2012년 3월 19일 서울 삼성물산 본관 앞에서 '피 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를 했던 활동가들에게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채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4가지의 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중 절반 이상을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채물손괴 부분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만 인정하였다. 이에, 강정 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파괴한 삼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9월 16일에는 이지스함 등이 강정 제주해군기지에 처음 입항한 것과 관련하여 강정마을회, 제주범도민대책위와 함께 성명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도민과의 약속 이행점검이 우선이다"를 발표하여 군 함정 입출항 점검에 앞서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이행여부와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및 항로 안전성 등을 먼저 검증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1월 31일에 있었던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국방부는 강정마을에 사죄하고 해군관사 건설 철회하라”는 성명을 2월 2일에 발표하였다.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더라도, 천주교연대는 이후에도 군사주의로 무장된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4월 2일부터 5일까지는 강정마을에서 ‘강정 성주간 전례’를 진행하고 예수부활대축일 미사를 봉헌하였다.

9월 5일 강정마을에 세워진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의 축복식이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의 주례로 열렸다. 9월 7~9일에는 강정마을에서 '2015 강정 평화 컨퍼런스'를 제주교구, 예수회 인권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2회 강정 평화 컨퍼런스 <제주 평화의 섬 선언 10주년, "비무장 평화의 섬, 그 의미를 조명, 성찰하고 계획한다">는 강우일 주교, 제주대 고창훈 교수, 오키나와의 오시카와 주교, 마고사키 우케루의 주제 발표와 알뜨르 비행장 평화공원 조성/ 동북아 비무장 평화연대/ 평화교육 세 개의 주제별 소모임 토론, 알뜨르 비행장 평

화기행으로 진행되었다. 알뜨르 비행장과 지하 갱도 일대를 돌아보는 평화기행의 시간을 갖고 9일에는 예수회 정제천 관구장이 집전한 파견미사를 끝으로 컨퍼런스를 마쳤다.

10월 12일에는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출범 4주년 미사가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열렸다. 4주년 미사는 제주교구 총대리 김창훈 신부의 주례와 서울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박동호 신부의 강론으로 봉헌되었다. 이후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주민들, 지킴이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서 운영회의를 가졌다. 운영회의를 통해 천주교연대는 강정현장팀이 중심이 되어 매일 오전 11시에 이어가는 강정 생명평화미사에 해군기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9월에 개관식을 가진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서 해나갈 다양한 평화활동들에 연대하기로 하였다.

MCSKY & SEWOL 저항과 연대의 제주평화기행

밀양송전탑반대주민들(M), 청도송전탑반대주민들(C),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들(S), 강정제주해군기지반대주민들(K), 용산참사유족들(Y) 그리고 세월호참사가족들(S) 등이 함께 한 저항과 연대의 제주평화기행이 8월 23일~25일 제주 강정마을과 4.3 평화공원, 4.3 학살현장 등에서 개최되었다. 밀양주민 60여명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일행들이 함께하며 제주 해군기지 반대 현장활동, 환영회, 화합의 밤 등을 진행했다. 그동안 긴 싸움을 통해 입은 마음의 상처들을 서로 공유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 좋은 기획으로 평가된다. 많은 단체들이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천주교 단체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이후 세월호 가족들이 밀양과 강정을 따로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연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6년 새로운 방식과 장소에서 다시한번 MCSKY & SEWOL 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획을 준비 중에 있다.

2015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의 밤 <인권과 평화, 그 달콤한 연대>

4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3월 19일 저녁 7시,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후원의 밤 행사와 4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였다. 4회 이돈명인권상은 '무지개 농성단'이 수상하였다. 무지개 농성단은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일부 보수세력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차별금지조항에 성적 지향을 넣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선포하지 않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무지개 농성단은 2014년 12월 6일 서울시청 로비에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이다!”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점거농성을 시작하였고 12월 11일까지 6일 간의 농성을 펼쳤다. 이에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성적 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고 밝히며 ‘무지개 농성단’에 연대하였다.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폭넓은 연대로써 이를 넘어서고자 했던 무지개농성단의 활동은 많은 시민들의 의식을 환기시켜주었고, 이후 우리 사회와 인권운동진영이 차별과 혐오에 맞서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4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후원의 밤과 시상식 축하공연으로 가수 임정득의 노래와, 게이코러스 G-voice의 합창이 이어졌다.



8월 3일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3천일에 접어드는 날이었다. 2015 감정생명평화대행진에는 세월호 가족, 쌍용차를 비롯한 해고노동자,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용산참사 가족 등 전국에서 평화를 염원하며 모인 연인원 4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였다.



강론글 1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한국 난민제도의 현황 및 문제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아일란 쿠르디 사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정적인 여론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간 난민에 대한 관심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을 통하여 난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단지 시리아 난민에만 국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내 시리아 난민에 대한 보호 부족 문제는 기실 시리아 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난민제도 및 운영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한국의 난민인정 심사 단계의 문제

2013년 이전까지 난민제도는 출입국관리법하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과 인권적 관점에서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보호하는 제도는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3년 난민법이 별도의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 홍보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난민인정 심사를 하는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시각은 여전히 외국인 출입국 통제 시각에서 난민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난민신청자의 80%를 진정한 난민이 아니라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남용신청자로 보고 있다고 서슴없이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시각은 낮은 난민인정률 결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통계 기준 한국의 난민인정률 5.29%는 OECD 국가 32개국 중 27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14년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글로벌 동향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난민보호 수용력이 189개 국가 중에서 119위입니다. 국내총생산 세계 11위, 1인당 국내총생산 28위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한국의 난민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출입국장에서 난민심사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이라며 송환대기실 구금이란 방식으로 송환을 강제하는 형태로 국경에서의 거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출입국장에서 총 55명이 난민신청을 하였고 그 중 38%인 21명만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었습니다. 62%의 난민들에게는 정식으로 난민인정심사 절차에 접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난민인정심사 조차 불허된 난민들은 숙소로서 기능이 없는 송환대기실에서 치킨과 콜라(최근에는 햄버거 업체가 문을 닫음에 따라 빵과 음료가 식사로 제공되고 있다고 함)로 연명하고, 남녀 방이

모두 외부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아크릴 벽으로 되어 있어, 특히 여성 외국인들에게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장기간 대기하다보니 몸이 아픈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외부진료를 받기 힘들어 병이 악화되는 등 매우 열악한 처우에 있습니다.

3. 난민 지원의 현황 및 문제

시리아 난민에 대한 관심이 일기 이전에는 한국에 난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난민에 대한 관심이 적은 그 때에도 신기하게 난민 관련 기사들에는 꽤나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가장 많은 댓글이 우리나라 세금으로 왜 난민을 돕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다든지,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지원의 실체를 알게 되시면 난민지원에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홍보 및 부족한 정보제공,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 신청시 어려움을 겪고,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난민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취업교육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니 대부분의 난민들이 단순노무 및 일용직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난민 대부분의 주거 형태는 '월세 등 임대주택'인데, 월세 및 임대차 보증금은 대개 친지나 종교 단체를 통해서 지원 받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장기숙사, 음식점, 또는 가게 내의 임시숙소', '친구 집'에 거주하기도 하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합니다. 또한 난민인정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 및 직장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지불을 못하여서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난민 아동의 경우 취학통지서가 발송되는 방식이 아니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할 신청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할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장이 입학할 거부하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편 취업 등을 위하여 대학 진학을 원하지만 학력 증명의 어려움 및 대학 입시전형 통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신청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아무런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생계비 신청이 가능하지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청자 중 50%만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409,000원 밖에 되지 않아 이 금액으로는 사실상 생계가 불가능합니다. 난민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 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로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을 요구합니다. 취업활동 허가도 나지 않은 난민을 위해 미리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줄 사업주를 난민신청자가 물색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고용주들은 난민신청자의 G-1비자를 임시 비자로 알고 있어 노동계약을 꺼리기도 합니다. 구직의 어려움은 결국 열악한 근로환경의 감수와 추가적인 권리침해로 이어 집니다. 또한 난민신청자들은 본국에서 박해 경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난민인정자와 달리 난민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어 난민신청자의 건강권이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난민신청자는 심지어 구금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인데, 구금된 난민신청자의 경우 과거 박해 경험 때문에 더욱 정신질환이 우려되지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년 9개월간 보호소에 구금되었던 이란 출신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소에 구금기간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빨이 거의 다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인천 영종도에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연간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는데, 예산에 비하여 실제 매우 적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해외 각국의 정책과 달리 한국은 도시와 떨어진 대규모 시설로 운영하고 있어 난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4. 결어

필자가 일하고 있는 어필(APIL)에 가끔 ‘왜 난민을 돕느냐’며 항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난민들이 처해있는 어려움 및 인권적 측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한국이 얻는 효과, 6·25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현재의 유엔난민기구와 유사한 유엔한국재건단(UN Korea Reconstruction Agency, UNKRA)이 설립되어 한국이 도움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2014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직 수임국이 바로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즉 난민들을 돕기로 국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중국이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을 고문하고, 강제북송하여서 우리가 많이 분개하는데, 한국이 난민협약을 무시하고 난민들을 강제송환한다면 우리와 중국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역지사지의 시각으로 바라봐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부도 난민에 대한 국제적 책임감을 가지고 인도적 시각에서 난민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적정통제 관점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난민제도의 남용 차단보다는 한국의 경제력 수준에 걸맞은 실질적 난민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론글 2

박동호
신정동성당 주임신부
서울 정의평화위원회

회칙 「찬미받으소서」

박동호

신정동성당 주임신부

서울 정의평화위원회

“이 시점에 누군가를 권력에 집착하도록 획책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 필요했을 때 행동을 취하지 못한 무능함으로 기억될 뿐인데도, 그가 그 권력에 집착하도록 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회칙 57항)

“우리는 아무도 묻지 않는 물음에 대해 절대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면서,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폭넓고 깊은 감수성을”¹⁾ 가져야 한다고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호소한 ‘교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해 우리나라를 다녀가신 프란치스코 교종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교회의 사람이면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분입니다(권고, 273항). 그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자신의 사도권고의 ‘강론’ 부분에서 이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는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특히 ‘사목자’들에게 한 호소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교종은 회칙 『주님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이하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회칙’이라 부르지만, 모든 사람이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편지(encyclical letter)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어느 뉴스 보도는 교종의 이 편지를 두고, 미국 공화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적으로 반발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내용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편지가 너무 길어서 읽는 데 힘이 들기는 하겠지만, 독자들께서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편지가 왜 그렇게 즉각적이며 단호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더 바란다면, 우리의 현실, 우리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를 자문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교종은 오늘의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고안하여 자기 파괴적 악행을 키운다.”고 합니다. 즉 “그 악행들을 보려하지 않는 것, 그 악행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 그리고 아무런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가장하는 것”을 고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한마디로 ‘회피’의 면허증이라 하는데, 이 면허증을 갖고 오늘의 우리는 “지금의 생활방식과 생산과 소비 모델을 지속”(회칙, 59항)시키려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의 생활방식이 어때서? 좋기만 한데, 없는 것 없고 얼마나 좋은데, 교종은 왜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하는 거지?”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생산과 소비가 어때서 그래!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종 같은 “종교인이 세상일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세상 문제에 불필요하게

1) 『복음의 기쁨』, 155항, 이하 권고

개입하여 혼란을 야기한다.”고 점잖게 꾸짖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교종의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정보의 홍수 속에 흘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전장에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 이등병”(권고, 96항)의 애인이 보낸 편지처럼 읽고 또 읽으며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유대를 확인하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변함없는 연대와 형제애를 다짐하면서 동행의 길을 나설 것입니다.

회칙은 사회적 약자와 지구의 절규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실제 영향을 주는’ ‘폭력’ 때문에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귀를 막지 않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우리의 누이와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탄원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이 누이가 지금 우리가 그녀에게 입힌 상처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그것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회칙, 2항) 누이가 누구입니까? 나와 피를 나눈 혈육이 아닙니까? 그 누이는 또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또 자식들이 입힌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이 누이이며 어머니는 바로 나의 이웃이며 우리의 ‘대지’입니다.

이쯤 되면, 독자들께서는 교종의 편지가 ‘환경’에 대한 것이라 대뜸 눈치 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자연을 보호해야지!’할 수도 있겠으나, 그 분은 그렇게 대중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환경과 인간과 윤리의 타락”(회칙, 56항)이 동맹하여 “끔찍한 불의”(회칙, 36항)를 저지르고 있으며, 대다수의 우리는 그에 대해 ‘회피의 자격증을 갖고’ 그 불의에 침묵합니다. 그러는 사이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는 신음하고, 하늘과 땅과 물에서 그 존재로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무수한 하나님의 창조물의 찬미 노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무수한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나라는 배제되어 내버려지고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교종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일에 “예”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피’일뿐 아니라 ‘거절의 다른 방식’이며 ‘숙이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권고, 251항) 교종은 “기꺼이 갈등에 용감하게 맞서고,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과정의 고리에 그 갈등을 연결시키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 길이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권고, 227항) 그래서 교종은 고통스러운 불편한 현실과 마주섭니다.

교종은 회칙의 제 1장에서 ‘우리의 공동 가정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오염과 기후변화, 물의 빈곤, 생물다양성 상실, 인간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의 고장, 지구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검토를 제안합니다. 교종은 이 문제들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카펫 아래에 쓸어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검토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자각”, “세상의 고통을 인격적 고통으로 전환시키기”, 그리고 “행동의 길찾기”를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회칙, 18항)

교종이 교회, 특히 개별교회에 ‘식별·정화·개혁의 과정’을 촉구하신 것을 기억한다면(권고, 30항) 너무나 당연하고 실질적인 초대입니다. 사실 교종은 ‘실재주의자’라 자처합니다(권고,

109항). 그런데도 그 시급성과 중대함에 비해 우리의 응답이 턱없이 미약하기에, 새로운 ‘대화’의 필요성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대화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나서겠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교종은 회칙에서 ‘병의 증세’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소개하며 문제를 야기한 배경 곧 구조적 원인을 드러내려 합니다. 지루하겠지만 옮겨놓겠습니다.

“진보와 인간 능력에 대한 비이성적 자신감”(19항), “기술과 기업 이익의 결합”(20항), “내다버리는 문화와 자원보존능력을 결여한 산업시스템”(22항)과 악순환(24항), 광범위한 무관심과 동료에 대한 책임감 상실(25항), “일부 더 많은 자원과 사회적·정치적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기적 관심”(26항), “물 자원을 사유화하여 시장의 규칙에 종속된 상품으로 만들려는 경향”(32항), “기업의 이익과 소비에 기여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인간의 자연에의 개입”(34항), “거대한 경제세력, 초국적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38항), “지금의 발전모델”(43항)과 “지난 2백년의 성장”(46항), “사회적 약자들과 멀리 떨어져”, “부유한 도시에서”,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는 “전문가들, 여론 형성가들, 소통 미디어와 권력”의 “실재의 중요 부분들을 무시하는 편향된 분석 제시”(49항), “지금의 분배모델을 합법화하려는 시도”(50항), “구조적으로 부당한 상업관계와 소수 시스템”, “차별화된 책임의 무시”(52항), “정치, 자유, 정의에 대한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기초한 새로운 권력구조들의 압도”(53항), “경제와 기술 사이의 동맹과 나약한 정치적 대응”(54항), “투기와 금융소득을 우선하는 경제권력”(56항), “충돌에 대처해야 할 정치에 강하게 저항하는 막강한 금융세력”(57항).

듣기가 매우 거북한 말을 왜 했을까요? 그리스도교 신앙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의 가난한 교회**를 희망합니다.



강론글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교종 레오 13세(1878-1903)는 역사상 첫 번째 사회교리 회칙인 ‘새로운 사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본가와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고용인들을 노예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이 혹시라도 그리스도교인이 됨으로써 더욱 품위를 지니게 되는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성과 신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은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고로써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품위를 드높여 준다. 참으로 부당한 일은 인간을 마치 이윤 추구를 위한 물건처럼 마구 다루는 것이고 오직 노동 기술이나 노동력으로써만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다.”

교종 비오 11세(1903-1914)도 회칙 ‘사십주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이란...사실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노동자도 그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노동은 일종의 상품처럼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수요 공급은 노동 시장에서 인간을 두 진영 같은 두 계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양편의 거래는 이 노동 시장을 두 개의 군대가 전투에 참가한 싸움터로 바꿔놓고 있다.”

비단 두 교종뿐만 아니라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종 프란치스코도 불평등의 경제를 “도둑질을 하지 마라”가 아닌 “사람을 죽이지 마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¹⁾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번 노동정책은 가톨릭 사회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번 노동정책의 핵심은 인간을 이윤 추구를 위한 물건처럼 다루면서 오직 노동기술과 노동력으로써만 노동자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노동정책에는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는 이번 기회에 노동관계에 일대 대변혁을 가져 오겠다고 베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노동 개혁을 뽑았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직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대신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 중 대표적인 세 가지 정책,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제도 도입’, ‘저성과자 해고 제도 도입’, ‘동의 없는 임금 삭감 제도 도입’을 중심

1) 이상의 내용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수용 신부가 ‘비정규직 확산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발제한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고통을 막는 종교계의 역할’ 발제문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지는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의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후에는 생계에 위협을 받습니다. 사용자의 눈 밖에 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힘듭니다. 노동조건이 열악해도 참아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의 기회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 임금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70%는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연장근무수당·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재로 인한 사망 비율은 정규직 노동자의 6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답은 무엇일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에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엉뚱하게도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먼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2년이 넘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하는 노동자, 즉 정년이 보장되는 노동자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주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합법화하겠다고 합니다. 35세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4년까지는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써도 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파견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파견은 파견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업체에 파견을 보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용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이 달라지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견 노동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 더하여 더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파견 노동이 가지는 문제가 크다 보니 지금까지는 법에서 파견이 가능한 업종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55세가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파견 노동자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업종에 상관없이 파견 노동자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은 파견이 허용이 안 되는 업종이었는데 제조업에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제조업에 파견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 반발이 거셀 것이 예상되니까 정부는 제조업이라는 말 대신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6개 업종)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뿌리산업에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둘째, ‘저성과자 해고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자는 말 그대로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는 일터를 잃으면

곧바로 소득을 잃게 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일터는 돈벌이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존엄성을 실현하는 공간이 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에 반하여 직장을 잃지 않을 권리, 즉 안정적인 일자리는 헌법이 정하는 노동권의 핵심이자 모든 노동관계, 사회관계의 전제이자 필수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실적이 부진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해고뿐만 아니라 정직, 전직, 감봉, 배치전환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여타 제도와 달리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곧바로 일반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실적 부진자를 굳이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실적 부진자는 객관적인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 부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기업은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노동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평가 결과가 불공정해도 노동자는 항의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용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매일매일 실적의 압박을 받으며 피 말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어제의 동료는 오늘의 적,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평가의 속성상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상대 평가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굳이 기준이라면 경쟁자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경쟁자 역시 나를 꺾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더욱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성과자라는 낙인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상사의 눈 밖에 나면 저성과자가 됩니다. 입바른 소리를 하면 저성과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해고되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게을러서 해고되었다고 스스로 탓하게 만드는 것이 저성과자 해고제도입니다.

셋째, ‘동의 없는 임금 삭감 제도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임금피크제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를 아우르는 임금체계의 개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직급과 연차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소위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실적이나 능력이 떨어지므로 임금을 줄이겠다는 것을 임금피크제로, 실적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을 직무성과급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른 임금 결정은 언뜻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성과자 해고 제도와 똑같이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도 같은 폐해를 낳을 것입니다. 임금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동료들과 피

말리는 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임금이 떨어지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탓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수단으로 같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더 높은 노동 강도로 노동자를 쓸 수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임금이 오르리라 기대하지만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객관적인 임금 지급 기준(예컨대 연차, 기본급, 근무시간, 직급)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떨어졌다고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합세해서 임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 임금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노동자는 파편화되고 개별적인 존재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임금체계를 법 개정 없이 회사에 바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혹은 노동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임금체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비정규직, 중소기업 사업장의 노동자들입니다.





강론글 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주해군기지저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해방과 분단 70년, 이제 평화를 실천할 때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주해군기지저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2015년은 전 세계가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는 당시 분단된 후 한국전쟁을 겪었고 지금까지 분단된 채로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또한 인류에게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 원자폭탄이 최초로 사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전후 70주년을 맞는 동아시아는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서세동점(西勢東占)과 식민지 쟁탈전의 대상이 되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의존관계가 깊어지는 한편, 군사적 긴장과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누군가 이렇게 경고했다. 세계에서 전쟁을 발생시킨 “유럽의 과거는 아시아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¹⁾. 대서양을 둘러싼 유럽의 패권경쟁이 지난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불렀다. 서구 기술문명을 일찍 수용한 일본도 같은 시기에 아시아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20세기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대서양 패권경쟁의 비극이 21세기 태평양에서 다시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

동아시아 평화와 일본 평화헌법

동아시아 전후체제의 변화를 얘기하려면 먼저 일본 평화헌법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헌법은 세계대전과 제국주의 침략의 불행한 과거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일본국민과 국제사회의 약속이며 안전장치이다.

일본 평화헌법의 역사에는 70년 된 동아시아 전후 체제의 명암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전후 유럽에서는 독일이 분단되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가 분단되었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일본이 아닌 식민지 한반도가 분단된 것이다. 반면 일본은 천황제는 물론이고 예전의 영토-심지어 일본의 본래 영토가 아닌, 19세기에 무력으로 합병한 류큐(오키나와)까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대신 전쟁을 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일본 헌법에 담게 된 것이다. 결국 평화헌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대가로 한반도와 류큐(이후 오키나와로 표시하기로 함) 주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식민지 및 점령지 주민들이 크나큰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하지만, 평화헌법마저도 곧 변질되기 시작했다.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체결을 계기로 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전범국인 일본을 동맹국으로 삼아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계산이 반영되어 있다.

1) Aaron Friedberg, "Ripe for Rival",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3.

한마디로 동아시아의 전후체제는 한반도와 오키나와를 비롯한 주민들의 희생, 그리고 전범국 일본에 대한 불완전한 책임 추궁으로 점철된 불완전한 전후체제, 정의롭지 못한 전후체제, 갈등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둔 전후체제가 된 것이다.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은 ‘전후시대를 극복’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전후시대 극복을 과거사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아베 정권은 동아시아 평화의 안전핀인 평화헌법 9조를 ‘재해석’을 핑계로 사실상 폐기하려고 한다. 안보법제 개정을 강행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이란 이름으로 미군과 함께 일본의 군대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진정한 ‘전후시대의 극복’은 과거사를 잊는 것이 아니라 불행했던 과거사를 인정하고 군국주의 유산을 확실히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불완전한 평화헌법을 온전한 평화헌법으로 개선하는 것, 핵우산과 군사동맹에 의존하지 않는 모범적인 평화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대다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분명한 행동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아베가 추구하고 있는 전쟁법안에 대해 일본의 헌법학자 90% 이상이 위법이라 주장했고, 국민의 과반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화헌법을 지키고 온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일본 시민들의 행동은 군비경쟁으로 치닫는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올 희망의 싹이다.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비난하면서도 사실상은 협력하는 상반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여론과 국회의 반대로 중단되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양해각서 형태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으로 대체하여 지난해 말 체결하였다. 2010년에는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는 상황을 가정한 한미 상륙작전 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참관을 허용했다. 한미일 간의 연례적인 군사훈련도 2012년 이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일본 시민들의 노력에 연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 정부와 군대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는 일이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동아시아 평화

일본 평화헌법과 더불어 동아시아 전후체제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 한반도 정전체제다. 분단된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군비가 결집한 곳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연습이 매년 수행되는 동아시아의 화약고이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형성된다면 일본 평화헌법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의 가장 강력한 축이 될 것이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온전하게 발전시키는 것과 동아시아의 왜곡된 전후체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도 직결되어 있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산물임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핵 군비경쟁의 산물이자 그 일부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핵우산을 강화하고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해법이 될 수 없다. 도리어 핵 역지력에 의존하는 군비경쟁만 촉발하여 관련국 국민들과 세계를 더 큰 핵위협에 노출되게 될 뿐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와 신뢰회복이 필수다. 2008년 이래 중단된 6자회담은 조건 없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또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 남한, 일본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관계개선, 평화협정 체결, 소극적 안전보장과 군사적 위협 자제 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평화방안을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는 동북아시아 나라들의 핵무기에 대한 이중기준이 만들어 낸 딜레마다. 남한과 일본 국민들 중 많은 이들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핵우산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오래 전인 냉전시절부터 일본과 한국은 핵우산에 의존해왔다. 이미 50년대 중반에 남한과 오키나와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다. 남한에는 1990년대 초반까지 1000기 이상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지금도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 등이 한반도와 일본에 드나드는 것을 막을 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속한 동북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크던 작던 핵 역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에 집착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남북한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일본과 남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 역시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가 동북아시아 차원의 비핵지대 건설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6월 24일,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시작되었다. 몽골 정부와 민간단체인 ‘블루배너’가 주선하는 민간 6자 회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그것이다. 이 프로세스에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 국가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그리고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다. 남한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북한의 민간주체로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가 참여하고 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향후 4-5년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촉진하고, 여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정례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의미는 민간 주도의 분쟁해결 대화라는 점이다. 안보전문가나 정부기관 간의 ‘안보’대화가 아니라 분쟁해결 전문가와 평화전문가들의 분쟁해결 대화다. 프로세스 참가자들은 각국 정부와도 긴밀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하여 정부 간 대화 활성화에 가교역할을 할 예정이다.

영토/영해 갈등과 동아시아 평화

한반도와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새롭게 촉발하는 것은 최근 분출하고 있는 역내 영토/영해 갈등과 이를 빌미로 한 패권경쟁이다.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은 대개 멀지 않은 과거의 역사적 비극들과 잇닿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오키나와, 대만, 제주도 같은 섬들은 아시아 영토 및

영해 갈등과 패권경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들이다. 최근 동아시아 군비경쟁의 전초기지로 전략하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는 일제 식민통치와 태평양 전쟁기간 동안 대륙 침략의 전초기지로 사용되었던 섬이다. 한반도가 분단된 후인 1948년에는 공산주의 토벌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된 비극의 섬이기도 하다. 이 섬을 남한 정부는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했다. 최초의 아이디어는 도민들에게서 나왔다. 냉전 해체 이후 제주도가 여러 차례 국제평화회담이나 남북 당국간 평화회담의 장소로 이용된 것에 착안하여 제주도를 평화의 교량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을 중앙정부가 수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직후 남한 정부는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했다. 2007년 이래, 해군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지역인 제주도 범섬(Tiger Island)을 2Km 남짓 앞에 둔 제주도 강정마을에 핵 항공모함 두 척과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 십여척의 대형군함이 동시에 기항할 수 있는 거대한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강정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했지만, 주민의사에 반하여 기지건설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해군이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의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면서 부두공사를 본격화한 2011-2012년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구상이 본격화된 해이기도 하다.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력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2012년 이래 한미일 해군은 합동군사훈련을 매해 실시하고 있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대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이란 미 핵 항공모함 두 척, 그리고 핵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선회장과 수심을 갖춘 정박시설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해군은 미군은 단지 제주해군기지를 ‘항지’로 이용할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얘기한다. 하지만 미 해군이 동맹국에게 요구해온 것, 특히 중국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항지’이다.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따르면, 미군은 언제든지 한국정부의 허락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내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오키나와나 괌과 더불어 한미일간의 해양군사동맹의 거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해군기지는 올해 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공군기지 건설도 곧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괌과 오키나와, 제주도과 다른 많은 아시아태평양의 섬들이 군비경쟁에 희생당해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다. 동아시아 바다의 민감한 지역에 건설되는 전초기지들, 그리고 이 기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자극적인 군사훈련과 핵/미사일 군비경쟁은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도리어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군사적 분쟁으로 악화시킬 것이다. 이 지역에 부족한 것은 전쟁수단이 아니다. 가장 부족한 것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들의 의지, 다자간 분쟁조정 공동협력 틀, 국경을 넘어 평화를 실천할 시민사회 역량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3000일을 기념하는 2015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는 특별히 오키나와, 나가노, 필리핀 수빅, 대만, 사이판 등의 활동가들을 공식 초빙하였다. 전 일정을 함께 걸으며

각 지역의 기지문제와 주민들의 저항에 대해 생생한 얘기를 나눴다.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매년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5.15평화행진에도 참여하여 오키나와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려는 주민들의 미군기지반대에 동참하고 있다.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강정, 사이판 등 전쟁기지로 악용되는 섬 주민간의 따뜻하고 강한 평화 연대. 이 연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강론글 5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세월호와 메르스, 그리고 인권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내가 가까스로 발견해낸 건 만일 우리가 타인의 내부로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면,
일단 그 바깥에 서보는 게 맞는 순서일지도 모른다는 거였다.
그 ‘바깥’에 서느라 때론 다리가 후들거리고 또 얼굴이 빨개져도
우선 서보기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았다.
그러니 ‘이해’란 타인 안으로 들어가 그의 내면과 만나고,
영혼을 훤히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몸 바깥에 선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렬하게 실감해나가는 과정일지 몰랐다.
그렇게 조금씩 ‘바깥의 쪽’을 좁혀가며 ‘밖’을 ‘옆’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 김애란, ‘기우는 봄, 우리가 본 것’, 「눈먼 자들의 국가」 -

1. 4.16 세월호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들

(1) 4.16 세월호 참사는 현재진행형

4.16 세월호 참사는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사회적 치유 모든 면에서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이 “정치적 의도”를 기정사실화하고, 혐오주의자들이 “세금도둑”, “시체장사”를 외치고, 상당수의 국민이 참사 피로감에 젖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치유와 회복만을 늦출 뿐입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함께하고자 했던 이들도 아무런 준비 없이 현장에 달려가는 것에서 출발하여 피해가족들 곁을 지키는 활동이 주를 이뤘습니다. 재난에 대한 첫 전국민적 대응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남기기는 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원하는 이들조차 제대로 일을 찾지 못하기도 하고, 내외부의 정치적 공세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그 자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원활동을 하나씩 복기하여 평가하고 큰 틀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논해야 할 때입니다.

(2) 4.16 세월호 참사가 던지는 질문들

4.16 세월호 참사는 인권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많은 화두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단체들이 많고 배상, 보상, 성금 등 많은 액수의 돈이 이야기되고 피해 가족들이 상대적

으로 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이라는 현실이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한다는 인권의 관점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4.16 세월호 참사는 위기상황, 특히 누구보다도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재난과 위기의 감소, 존엄과 안전이라는 이슈가 결국 좀 더 고민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인권의 이슈임을 제기합니다. 다른 급박한 인권상황도 그러하겠지만, 신속한 현장 개입과 신뢰성 획득의 필요성이라는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피해 가족들 내부적으로는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것인지, 결속력과 운영의 측면에서 조직의 안정성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내부의 다양한 소집단과 입장에 대하여 소통과 신뢰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내부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피해자 외의 집단 혹은 개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정부의 관련 부처들, 여당과 야당,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도움주려고 하거나 함께하려고 하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지 역시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기존 시민사회단체의 틀을 넘어서는 범국민적인 공감대와 네트워크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대국민 설득구조는 얼마나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 및 개인들의 참여와 공감대의 가능성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지 등의 이슈도 제기됩니다. 조직의 내외부적인 갈등을 어떤 원칙하에 어떻게 조정하고, 여러 위기로부터 어떻게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이 참사의 발생에 기여하고, 수습과 치유의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발현되었기 때문에 대의제의 붕괴와 직접민주주의의 발현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큰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과 싸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 권력은 가난한 자와 싸우고, 사회적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권력은 책임 회피를 위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그 피해자를 갈등 유발자로 낙인찍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4.16 세월호 참사와 그 후의 현실 그 자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2. 메르스와 격리 : 메르스의 공포 속에 당신의 '인간성'은 안녕하십니까

(1) 메르스의 공포 속 격리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감기’와 같은 감염병 관련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의 대상은 감염병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폭력성과 보통 사람의 잔인성입니다. 그러나 영화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메르스에 대한 공포 속에 국가폭력과 사람들의 무관심, 잔인성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있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격리자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격리자는 단지 격리시켜야 할 공공의 적,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바이러스, 격리자의 생명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나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기 위해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격리자는 본인들의 잘못이 전혀 없이 치사율 20%의 전염병에 노출된 피해자이자 가정, 직장, 사회생활 모두가 급작스럽게 중단되어 그 누구보다도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장 취약한 최악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비쳐진 격리자는 감염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켜서는 안 되기에 감금된 잠재적 가해자이자 최악의 피해자가 되는 순간 공식적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생존을 위해 국가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심리적,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숨죽인 채 오열하고 있는 최악의 가해자입니다.

(2) 격리자의 비인간화, 법치주의의 붕괴 속에 메르스 격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진실에 대한 권리, 정보접근권,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비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제와 관행의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격리자를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이중 삼중 격리시킴으로써 격리자 및 비격리자 모두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시켜 온 우리의 모습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격리의 기준은 여러 조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즉, “감염병환자등” (제41조 제1항, 제2항, 제42조),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41조 제3항 제2호),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 (제47조 제2호) 등이 그 기준입니다. 그러나 “감염병병원체 감염 의심”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법률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수의 메르스 격리자라고 볼 수도 있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언론, 의료기관 그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격리의 통지가 유일하게 보장받는 절차적 권리입니다(제41조 및 제43조). 그런데 시설 격리의 경우 인신보호법이 적용되어 관련 행정주체는 격리자가 법원에 그 격리의 위법성을 다투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인신보호법 제3조의2),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인신보호법 제20조). 그러나 시설 격리자 중 인신보호법 상의 구제청구 고지를 받은 이가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의심)에 격리가 더해진 격리자의 상황은 그 어떤 재난 상황보다도 취약한 재난 상황으로 봐야 하고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적용을 통해 단순한 생계뿐만 아니라 기존 가정, 직장, 사회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6월 3일에서야 격리자에 대한 최초 지원 조치로 이루어진 긴급 생계비 지원도 초기에 그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었고(6월 10일부터 소득 관계없이 지원), 6월 17일부터 유가족과 격리자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가 이루어졌지만 전화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름 후에 이루어진 생계지원, 한 달 후에 이루어진 심리 상담, 격리로 발생할 수 있는 혹은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피해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지만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 격리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하여

인권이 문제가 되는 때는 다수가 불편해하고 권력이 싫어할 때입니다. 특히 공포가 사회를 뒤덮고 있을 때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고, 평소에 인권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침묵하게 됩니다. 공포와 배제의 대상인 격리자에 대한 극단적인 관심과 무관심을 넘나들며 우리는 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을 공포의 이름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이들에 대한 물리적인 격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격리의 극복, 그리고 상실되어버린 우리의 인간성 회복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타인 안으로 들어가 그의 내면과 만나고,
영혼을 훤히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몸 바깥에 선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렬하게 실감해나가는 과정일지 몰랐다.



강론글 6

손희정
땡땡책협동조합 이사

재난 시대의 형오

손희정
땡땡책협동조합 이사

재난의 시대를 산다. 위험은 도처에 널려있고, 이내 재난으로 닥쳐온다. 재난은 제대로 예측되지도 수습되지도 않기 때문에 위기감은 일상이 되었다. TV 드라마나 영화, 소설, 웹툰 등 대중문화는 지속적으로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매일 매일이 재난에 대한 보도로 가득차 있다. 갈수록 재난과 파국에 대한 상상력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이다. 과거에 재난이 인간 외부, 즉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면, 이제 재난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문명으로부터 온다. 예컨대 쓰나미라는 자연재해가 방사능 유출이라는 인공재해와 만난 후쿠시마 원전 참사는 우리 시대 재난의 성격을 고통스럽지만 정확하게 보여준다.

재난의 시대를 산다. 위험은 도처에 널려있고, 이내 재난으로 닥쳐온다. 재난은 제대로 예측되지도 수습되지도 않기 때문에 위기감은 일상이 되었다. TV 드라마나 영화, 소설, 웹툰 등 대중문화는 지속적으로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매일 매일이 재난에 대한 보도로 가득차 있다. 갈수록

물론 지난 20여 년 간 한국 사회를 사로잡았던 재난의 스펙타클은 조금 더 인공적인 재난에 집중되어 있었다. 1993년 서해 페리호 대형 참사로부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7년 IMF, 1999년 화성 씨랜드와 인천 호프집 화재 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용산참사,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 펼쳐진 재난의 스펙타클은 그야말로 ‘화려’했으며, 이 모든 참사는 인재(人災)였다. 참사의 반복은 그 절절마다 국가가 선보였던 대책들이 아무런 실효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2015년. 우리는 그 모든 재난의 상처를 안고서 ‘포스트 416’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재난의 시대’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재난의 반복이 ‘재난의 시대’를 규정하는 전부는 아니다. ‘재난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보다 자본주의라는 삶의 조건이 재난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는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철학자 한병철은 “침몰한 세월호는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라앉는 배를 탈출한 선장은 공공심을 그저 망상이게 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육신”이라고 말한다. 세월호의 원인은 “규제완화, 노동 유연화, 민영화를 야기한 신자유주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규정짓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체제는 세월호 참사를 이미 예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그리고 그 당대적 판본인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세월호’는 언제고 어디에서고 다시 우리를 덮칠 수 있

다.

또 한편으로 ‘재난의 시대’란 이 세계 자체가 재난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를 ‘위험사회’라고 규정한다. 위험사회란 ‘통제 불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다. 근대 이전에 위험이란 자연에 의해 야기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근대에 위험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의 원칙으로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상상되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자연 정복에 대한 욕망은 근대에 이르러 달성된 듯 했다. 그러나 현대는 더 이상 “스스로 산출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속시킬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인류의 자랑이었던 문명은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할 수 없는 위험”을 불러온다(벡; 2012, 22쪽). 자연을 예측하고 그 위험을 다스리고자 오랫동안 투쟁해 온 인간은, 역설적으로, 기술 발전이나 생산성의 급증과 같은 문명의 혜택으로부터 비롯되는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다.

그런데 현대의 위험은 평등하지 않다. 벡에 따르면, 우리 시대의 위험은 ‘결핍사회’에서 부(富)가 분배되었던 위계와 질서를 따라 분배된다. 위험이 실현된 것인 재난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공평하게’ 닥쳐오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대형 참사에서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소년 피해자가 특히 많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누가 더 빈번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한다(이동연; 2014, 23쪽). 이때 ‘승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화가 생산해 온 위험은 “거대한 사업거리”다. “위험은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찾아 온 탐욕스러운 수요”인 것이다. “끓주림은 채워질 수 있으며 궁핍도 채워질 수 있으나, 문명의 위험은 밀빠진 독과 같은 수요를 가지고 있어서 충족될 수 없으며 무한히 자가 생산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온갖 위험에 대한 위협 뒤에 따라붙는 보험 광고를 흔하게 본다. 미리 미리 대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보험이란 재난의 예방과는 무관하다. 보험은 재난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장사를 하고, 그 예측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지불을 유예시킨다. 보험이야말로 위험과 재난이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준다. 위험의 확산과 상업화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다.”(벡; 2006, 58쪽.)

이처럼, 위험의 상존과 재난의 발생은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된다.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수해는 한 예다. 뉴올리언스가 카트리나로 초토화되자 재개발에 명을 걸었던 기업들과 공공영역 민영화를 추구했던 정치인들은 그 이해를 함께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남아시아 쓰나미 이후 서구 자본이 유입되었던 경과, 남아프리카 해안의 서구 자본 유입을 반대했던 원주민들이 자연재해 이후 결국 그 자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에서 재난은 빈번하게 자본의 방법론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재난 자본주의’(나오미 클라인; 2008)다. 재난 자본주의에서 재난은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흥미진진한 기회”가 되며, “공적 영역에 대한 조직적 공격”을 통해 신자유주의화를 가속화한다. 재난은 신자유주의화의 계기가 되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시대의 삶의 조건은 다시 재난을 초래한다. ‘악순환의 고리’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재난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면, 이는 사회적 위기가 된다. 그리고 공유된 위기감은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폐기해 버리는 반동적 복고주의의 도래를 불러온다. 사람들이 불안감 속에서 “자유나 평등 같은 근대적 가치보다 ‘안전’을 갈구”하게 되기 때문이다(문강형준; 2012, 22쪽). 유동성의 시대를 견뎌낼 견고한 세계관, 무너지는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구조적 안전망, 나의 불안을 잠재우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문화와 정서. 대중은 이와 같은 것들을 생명을 사지로 내모는 지배적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함으로써가 아니라, 전통적인 질서, 이미 익숙해서 이해하기 위해 따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신념 체계, 그리고 이미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득권의 인정 등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것들에서 찾으려 한다. 안전하다는 감각은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 질서를 유지해 온 권력에 의존할 때 더 쉽게 획득되기 때문이다. 상실의 고통이 경제 논리에 의해 간단하게 밀려나는 것 역시 우리가 이런 ‘쉬운 길’을 택하기 때문이 아닐까. 고통은 구체화되지 않지만, 경제는 쉽게 수치화되어 보여진다. 그리고 이런 경제논리란 한국 근대화 안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 설득력을 갖춰왔다.

그리하여 재난 희생자들은 ‘우리’로부터 배제되어 ‘타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때에야 우리는 안전이라는 판타지에 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통을 말하고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함께 일어날 것을 촉구한다는 이유에서 또다시 ‘이방인’이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정답이어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기억해야 한다고, 이 재난의 폐허를 응시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기’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은 불편하고 번거로운 존재들일 뿐이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재난의 피해자/희생자들을 ‘우리’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국가 역시 재난을 체제와 구조의 문제에서 건져내어 재빠르게 개인의 문제로 만드려는 노력 안에서 혐오를 조장한다. 그렇게 세월호는 ‘일개 교통사고’가 되고, ‘유병언이라는 부도덕한 개인만의 책임’이 되며, 특정 정치세력이 정쟁의 기회로 삼는 오염의 장이 되거나, 일부 유가족이 생떼를 쓰는 몰지각의 공간이 된다. 예컨대 특별법을 제정하면 국가의 질서와 안위가 무너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법석을 떠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이런 혐오의 수사는 대중들에게 의외로 쉽게 스며든다. 세월호와 혐오를 말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폭식투쟁이나 ‘세월오뎅’ 같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폭력의 장면을 떠올리지만, 이런 예들의 나열은 세월호를 둘러싼 혐오의 정서를 예외적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극악한 그 표층을 걷어내고 나면, 기실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의 정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혐오의 정서 안에서, 우리는 상실을 충분히 슬퍼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슬픔은 분노와, 분노는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차단하고 혐오와 허무주의적 냉소로 분노를 희석시켜 버릴 때, 우리는 세월호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기 힘들어진다.

폭식투쟁을 하거나 ‘세월오델’ 운운하는 일베와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재미’다. 아니, 오늘날 재미야말로 누구에게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한때 ‘웃음’은 세계를 뒤집는 불온한 것이었지만, 이제 웃음은 세계가 생산하는 모순과 고통을 잊게 하는 손쉬운 만병통치약이 되었다. “농담은 농담일 뿐”이라는 말은 농담을 농담일 수 있게 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들을 보지 말라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으라는’ 강요에 불과하다. 이렇게 재미와 웃음, 힐링을 통한 행복에의 추구가 정언명령이 된 시대에, 슬퍼하고, 애도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저 ‘노잼’일 뿐이다. 우리는 ‘노잼’이 슬픔과 분노를 반사시켜버리는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온한 것으로서 웃음을 되찾고, 그 웃음과 함께 충분히 슬퍼하고 정당하게 분노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 참고문헌

나오미 클라인, 『쇼크독트린』, 김소희 역, 살림Biz, 2008.

문강형준, 「왜 ‘재난’인가? - 재난에 대한 이론적 검토」, 『문화/과학』 72호, 2012.

울리히 벡, 『위험사회』,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울리히 벡, 『글로벌 위험사회』, 박미애·이진우 역, 도서출판 길, 2012.

이동연, 「재난의 통치, 통치의 재난」, 『문화/과학』 79호, 2014.



2015 인권주일 강론 강사 파견

1. 앞의 여섯가지 주제를 비롯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인권주일 강론 강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주일 강론을 필요로 하시는 본당에서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강론단 파견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인권주일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인권 사안을 중심으로 매달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 「교회와 인권」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3.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우리 교회와 그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국내 최초의 가톨릭 청소년용 인권교재 「모든 이에게 모든 것(Omnibus Omnia)」을 출간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인권이야기를 쉽게 접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예시와 삽화를 적절히 이용하였으며, 각 항목마다 사회교리를 인용하여 교회 안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작비에 준하는 권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권주일 강론 뿐 아니라 본당의 각종 모임 또는 교육, 특강 등에서 인권강의가 필요하실 때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 (02) 777-0641 chrc@hanmail.net

발행인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
주소 (우)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전화 02-777-0641
이메일 chrc@hanmail.net
홈페이지 cathrights.or.kr